

## 세계인이 보는 세계 금융위기 원인과 해법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은 세계 주요현안과 인권 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계여론조사(World Public Opinion survey)를 매년 실시한다. 2009년 조사는 4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 세계 인구의 62%를 포괄하는 20개국 나라 18,9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 \sim 4\%$ 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http://www.eai.or.kr>)과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에서의 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http://www.hrc.co.kr>) 담당했다. 주요 연구주제 및 조사 국가는 다음과 같다.

## ■ 2009 세계여론조사 주제

- (1) 세계리더/ 아시아 리더십 평가(6.29 GMT 21:00)
- (2) 오바마 시대, 미국 해계모니의 기회와 도전(7.7 GMT 13:00)
- (3) 세계경제위기 진단과 해법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7.21 GMT 21:00)**
- (4) 민주주의와 국회의 대표성 평가
- (5) 각국의 다수여론에 의한 소수여론 표현의 자유 억압 정도 평가
- (6) 지구온난화 인식과 각 국 정부 대책 평가
- (7) 종교 비판의 자유/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 ■ 여론브리핑 52호 목차... 대표집필 : 이곤수 · 정원칠 · 정한울

1. 세계여론,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 출구전략 시기상조
2. 경제위기는 미국과 정부-금융-소비자의 합작품, 거대 금융 국제규제기구 필요
3. 경제위기 쟁점 :
  - 1) 위기의 대기업, 공적자금 지원해야 하나? 한국 찬성 59%
  - 2) 국내기업 보호 장벽, 경제위기의 해법인가? 한국 반대 68%

##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EAI 정원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mailto:cwc@eai.or.kr))EAI 이곤수 거버넌스 연구팀 팀장(02-2277-1684/011-807-6023/[ksyi@eai.or.kr](mailto:ksyi@eai.or.kr))

##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mailto:cskim@hrc.co.kr))

## ■ WPO 2009 세계여론조사 조사국

|      |                                  |
|------|----------------------------------|
| 미주   | 미국 멕시코                           |
| 유럽   |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
| 중동   |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
| 아프리카 | 케냐 나이지리아                         |
| 아시아  | 대만* 마카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한국 홍콩* |

\* 외교적으로 중국이 대표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WPO는 전체 평균 산정 시 독자적인 국가여론으로 산정하지 않음.

\*\* 아제르바이잔은 경제위기 관련 문항을 조사하지 않음

## ■ 한국조사 개요

|       |                                  |
|-------|----------------------------------|
| 조사일시  | 6월 5일                            |
| 모 집 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 표본크기  | 600명                             |
|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
| 표집오차  |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pm 4.1\%$ |
| 응 답 율 | 12.9%                            |
|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

## EAI WPO 국제현안연구팀

|     |                            |
|-----|----------------------------|
| 팀 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 연구진 |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
|     |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
|     | 이곤수(EAI 거버넌스 연구팀 팀장)       |
|     |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
|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은?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은 미국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대표: Steven Kull 교수)가 주관하고 세계 주요국가의 연구조사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여론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매년 1~2회 20여국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결과를 주요 언론 및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 원장: 이숙종)이 연구협력기관으로 매일경제가 한국측 보도기관으로 참여한다.

## 세계여론,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이곤수

- 세계 19개국 평균 56% “정부 경제위기 대처 미흡하다”
- 한국 국민 G20 소속 조사 12개국 중 정부의 위기대처에 불만 가장 높아
- 미국 여론은 정부대응에 상충된 평가로 오바마 정부 곤혹
- 중국 국민 “정부 대응 적절하다 62%”

각국 정부가 취한 금리 인하와 통화·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출구정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매릴랜드대 조사기관 WPO와 진행한 세계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19개국 평균 56%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무려 80%가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세계여론 및 한국 국민들은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G20에 속한 12개국의 전체 평균값을 보더라도,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수이상이었다. 반면 "적절하다"는 28%이고 "정부 대응이 지나치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여론은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 독일, 인도, 중국에서는 각국의 경제침체에 대해 정부의 과잉 대응을 자제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이자 여전히 각종 경제지표가 여전히 불안한 미국에서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미국에서 정부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높게 나타났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응답도 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 대응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경제 대응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국민의 63%가 정부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위기 이래 수출지원 확대와 유동성 증대 등 강력한 정부 주도적 경기부양책을 통해 상황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중국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20%)거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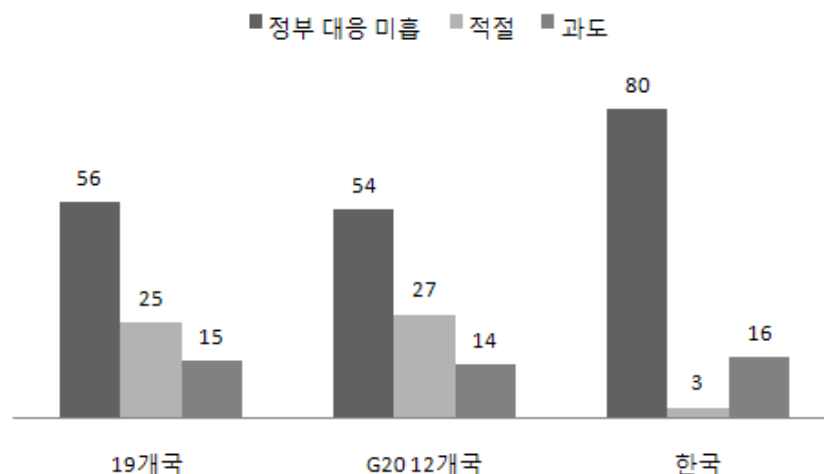
나치다(11%)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독일에서도 정부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40%였고, 과도하다는 응답은 17%였다.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는 답변도 35%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중국과 함께 2009년 실질GNP성장이 가능한 꼽히고 있는 인도에서도 경제위기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37%)과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36%)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국민은 정부의 경제위기대응조치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즉 한국 국민의 80%가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과도하다는 응답은 16%, 적절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정부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전체 19개 조사국가 중 우크라이나(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G-20 국가 중 조사에 포함된 12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우 OECD가 인정하듯이 가장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가 집중적으로 펼쳐온 경제정책과 국민들의 인식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과실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당장 출구전략이나 긴축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만큼 한국경제의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정부도 재정확대정책 기조를 당분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유동성의 과잉이나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언젠가는 소위 출구전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부정책의 결과물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정책전환 과정에서 정부는 또 한 차례 다수 국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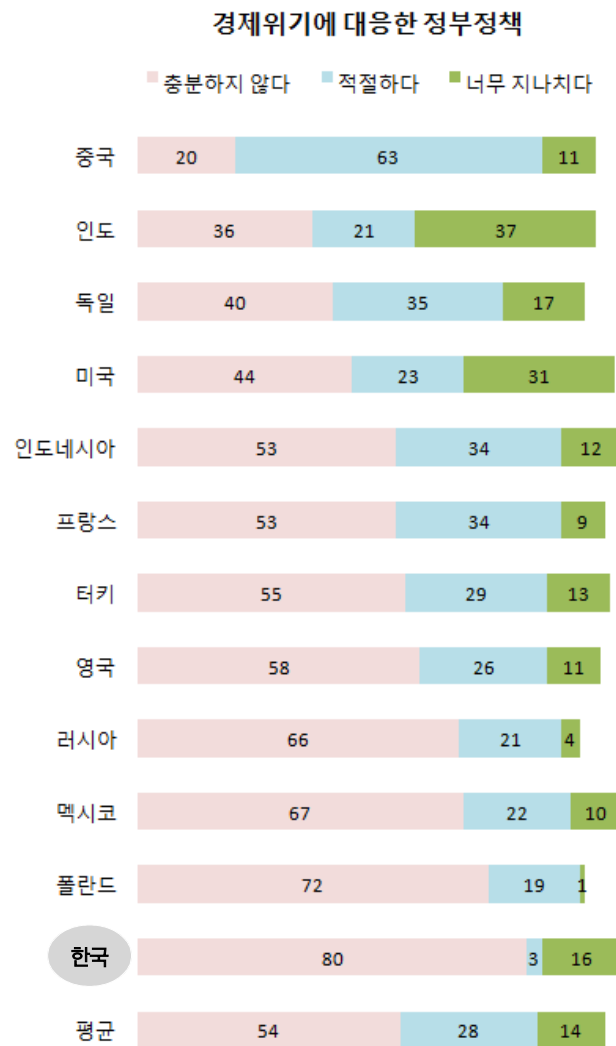
[그림1] 자국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평가 비교 - 전체 19개국, G20 국가, 한국(%)



자료: WPO · EAI · 매일경제(2009/6)

주: G20에 속한 국가 중 이번 조사에 포함된 나라는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한국 등 12개국이다.

[그림2] G20 12개국 국민의 자국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평가(%)



## 경제위기는 미국 및 각국정부, 금융, 소비자의 합작품

정 한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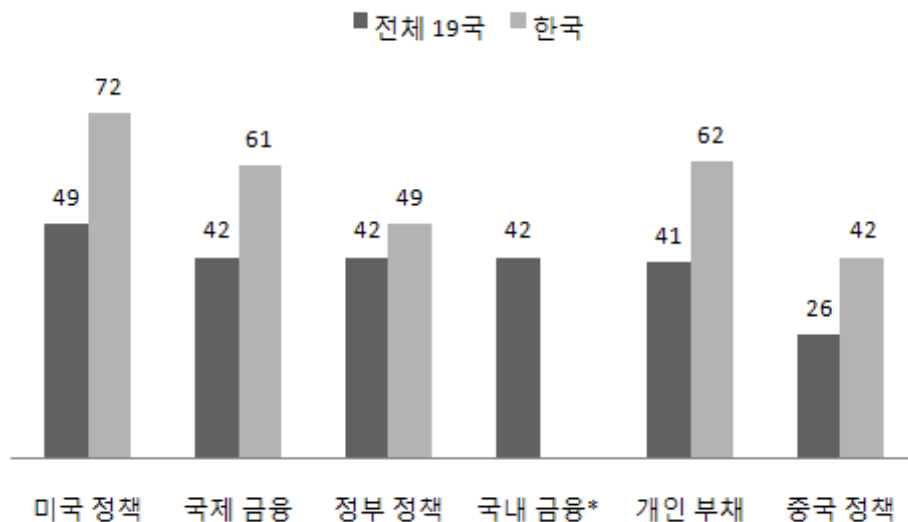
### ▣ 경제위기 책임은 누구?

미국 및 자국정부 감독 · 금융기관 위험투자 · 과도한 개인 부채 복합

- 19개국 여론, 경제위기는 미국, 국내외 금융기관, 국민 개인, 정부 정책 합작품
- OECD선진국은 국내외 금융, 개도국/후진국은 자국 정부 탓하는 경향 커
- 한국은 미국책임론 가장 강해(72%), 국제금융 책임과 과도한 개인 부채 지적도 많아

세계여론은 현재 각국이 겪고 있는 경제침체가 미국정부 및 자국 정부 정책의 실패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국내외 금융기관, 상황능력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부채를 쌓아 온 소비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 62%를 포괄하는 19개국 18,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정부의 정책이 현재 경제침체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9%, ‘약간 있다’는 응답은 33%, ‘전혀없다’는 응답은 10%였다. 반면 국제 및 국내 금융의 방만한 위험투자 관행이나 자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책임 있다는 응답이 각각 42%로 같았다. 국민개인의 과도한 대출과 부채도 각국의 경제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41%가 동의했다. 세계 유례없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침체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 각국 경제위기의 각 책임소재 : 각 요인별 “매우 책임이 있다” 응답비율(%)



자료 : WPO · EAI · 매일경제(2009/6)

\* : 한국에서는 문항 제한에 의해 국내금융에 대한 문항을 질문지에 포함시키지 않음

주 : 수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매우 책임이 있다”, “약간 책임이 있다”, “전혀 책임이 없다” 중 “매우 책

임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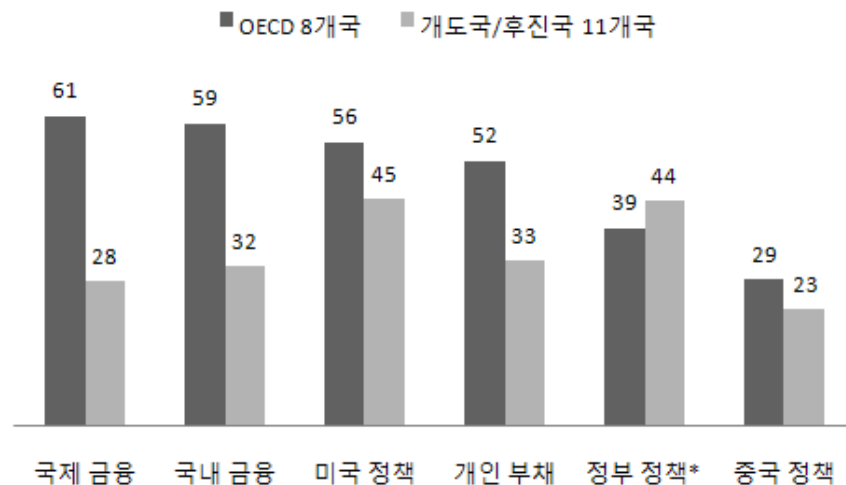
그러나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국민들 사이에는 경제위기의 책임에 대한 적지 않은 인식격차가 발견된다. 선진국 국민들일수록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운용과 이를 방치한 미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후발 개도국 국민들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개인 소비자 책임보다는 미국 정부 및 자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뚜렷하다.

후진국 혹은 개도국에 포함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1개국 국가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45%)와 자국 정부 정책(44%)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개인 소비자(33%)나 국내금융기관(32%) 및 국제금융기관에 책임(28%)을 묻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소속 8개국 여론을 평균해보면 미국(56%) 보다도 국제금융(61%) 및 국내금융기관(59%)에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다. 과도한 부채를 쌓아 온 개인 소비자의 책임을 묻는 응답은 52%로 다소 낮았고 자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한국 국민들 역시 다른 선진국 국민들의 인식패턴과 비슷하게 대외적으로는 미국(72%)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61%)과 가계부채를 확대해온 개인 소비자 책임(62%)을 묻는 경향이 강했다.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정부책임(49%)을 묻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미국을 꼽은 응답은 72%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다. 미국발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 경제 거시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2] OECD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위기 책임인식 차이(%)



자료 : WPO · EAI · 매일경제(2009/6)

## ▣ 경제위기, 거대 금융 활동을 감독할 국제규제기구 창설 여론 강화

### - 각국의 해외금융진출 규제할 국제표준 제정에는 미온적

미국발 경제위기가 리만브라더스나 AIG 등 미국 금융보험기업의 부실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 위기 해소 및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요 국가들이 제반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규제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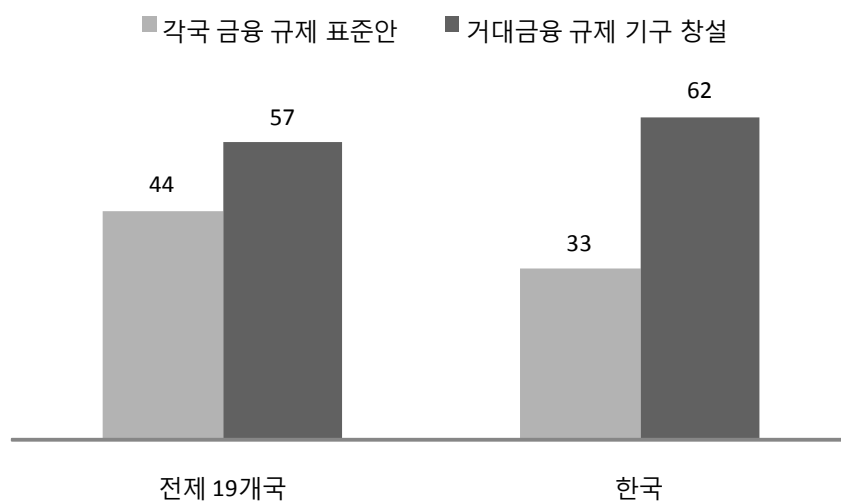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해외진출하는 각 국 금융기업에 대해 규제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9개국 평균 44%였고, ‘해외에 진출하는 각 국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기준은 각 국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47%로 팽팽했다. 독일(56%), 프랑스(55%), 중국(51%), 등에서 개별국가 금융기업에 대한 국제규제원칙을 표준화하자는 입장이 과반수에 달했다. 미국은 금융규제를 위한 국제규제표준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43%로 전체 응답평균과 비슷한 수치였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거대 금융기관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국제 규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19개국 여론을 평균한 결과 57%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국제금융기관이 만들어지면 각국 경제에 개입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 입장은 32%에 그쳤다. 중국 국민들이 국제금융에 대한 규제를 담당할 국제규제기구 창설에 가장 높은 찬성(79%)을 보였고 독일(71%), 프랑스(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규제와 감독기능이 강한 나라들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찬성비율이 44%로 과반수에 못 미쳤다.

한편 한국 국민들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 규제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 19개국 가장 지지가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33% 만이 국제규제 기준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안에 대해 지지했다. 규제 표준이라는 것이 일단 제정되면 각국의 협의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 및 재량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는 듯하다. 반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대 금융기관들에 대해 감독 및 규제할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규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한국인들의 62%가 지지를 밝혔다.



[그림3] 해외진출 금융기관 규제방안 찬성 비율 : 세계여론과 한국인 차이



[표1] 각국 금융기관 규제 표준안 및 거대금융에 대한 국제규제 기관 필요성(%)

| 국가          | 각 국의 해외진출<br>금융 활동을 규제할<br>국제표준 마련해야<br>한다 | 국가          | 거대금융 규제하기<br>위한 국제규제기구<br>창설해야 한다 |
|-------------|--|-------------|-----------------------------------|
| 나이지리아       | 58   | 중국**        | 79                                |
| 독일*         | 56   | 나이지리아       | 72                                |
| 프랑스*        | 55   | 독일*         | 71                                |
| 중국**        | 51   | 프랑스*        | 70                                |
| 케냐          | 51   | 케냐          | 68                                |
| 인도**        | 49   | 대만          | 67                                |
| 홍콩          | 49   | 마카오         | 66                                |
| 마카오         | 49   | 홍콩          | 65                                |
| 대만          | 49   | <b>한국*</b>  | <b>62</b>                         |
| 영국*         | 48   | 이집트         | 62                                |
| 팔레스타인       | 48   | 멕시코*        | 61                                |
| 이집트         | 47   | 영국*         | 60                                |
| 폴란드*        | 45   | 파키스탄        | 59                                |
| 미국*         | 43   | 팔레스타인       | 56                                |
| 우크라이나       | 40   | 인도**        | 51                                |
| 인도네시아**     | 39   | 인도네시아**     | 51                                |
| 파키스탄        | 39   | 폴란드*        | 48                                |
| 러시아**       | 38   | 미국*         | 44                                |
| 멕시코*        | 37   | 우크라이나       | 42                                |
| 이라크         | 35   | 이라크         | 42                                |
| <b>한국*</b>  | <b>33</b>                                  | 터키*         | 41                                |
| 터키*         | 33   | 러시아**       | 39                                |
| 전체          | 44   | 전체          | 57                                |
| OECD 8개국*   | 44   | OECD 8개국*   | 53                                |
| 개도국/후진 12개국 | 45   | 개도국/후진 12개국 | 56                                |
| G20 12개국**  | 41   | G20 12개국**  | 53                                |

## 경제위기를 둘러싼 쟁점과 세계여론

정원칠

- 위기의 대기업, 공적자금 지원 해야, 미국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찬성
- 국내기업 보호 장벽, 주요 무역국에서는 반대여론 강해 한국도 반대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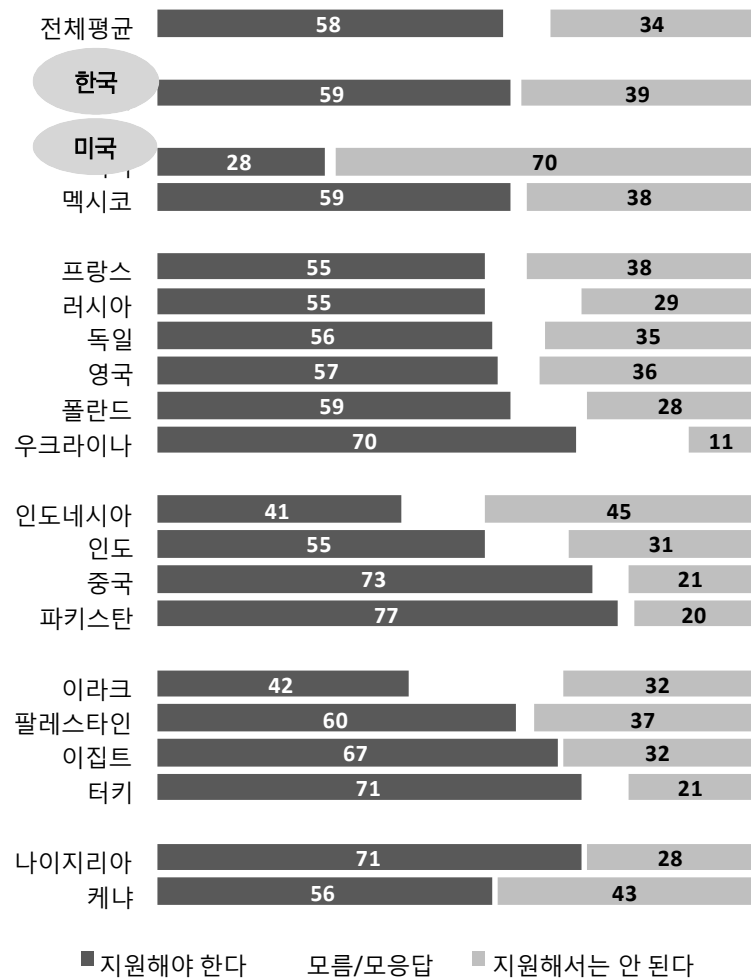
### ■ 위기의 대기업, 공적자금 지원해야 하나?

- 세계 19개국 58% 찬성, 반대 34%
- 미국만 반대여론 강해, 미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찬성
- 한국 찬성 59%

조사 참여 19개국의 전체 응답은 ‘지원해야 한다’가 58%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의 34%보다 높았다. 대체로 파키스탄(77%), 중국(73%), 터키(71%) 등이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조업 대기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가 회생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은 국가들에 속한다. 이에는 못 미치지만 영국(57%), 독일(56%), 프랑스(55%)와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위기에 빠진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자금 투입이 정당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찬성이 59%로 반대 39%를 넘어섰다. 그만큼 대기업의 경우 파산 시 각국의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국가경제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한 미국민의 비율은 28%였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업부실을 막지도 못하고 결국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즉 미국민들의 생각은 망할 기업은 망하게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미국 여론은 대체로 시장자유주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1]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인식(단위 %)



▣ 국내기업 보호 장벽, 경제위기의 해법인가? 48 대 45% 이해관계로 찬반 엇갈려

- 서구 선진공업국, 중국 한국 등 수출주도 경제에서 보호주의 비판 여론 커
- 한국은 68%가 반대, 독일, 영국과 함께 보호주의 정책에 가장 비판적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경제적 이기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의제 중의 하나였다.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세계여론을 물어본 결과 찬성입장이 48%,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45%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보호주의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그 나라의 산업구조와 해외 경제 의존도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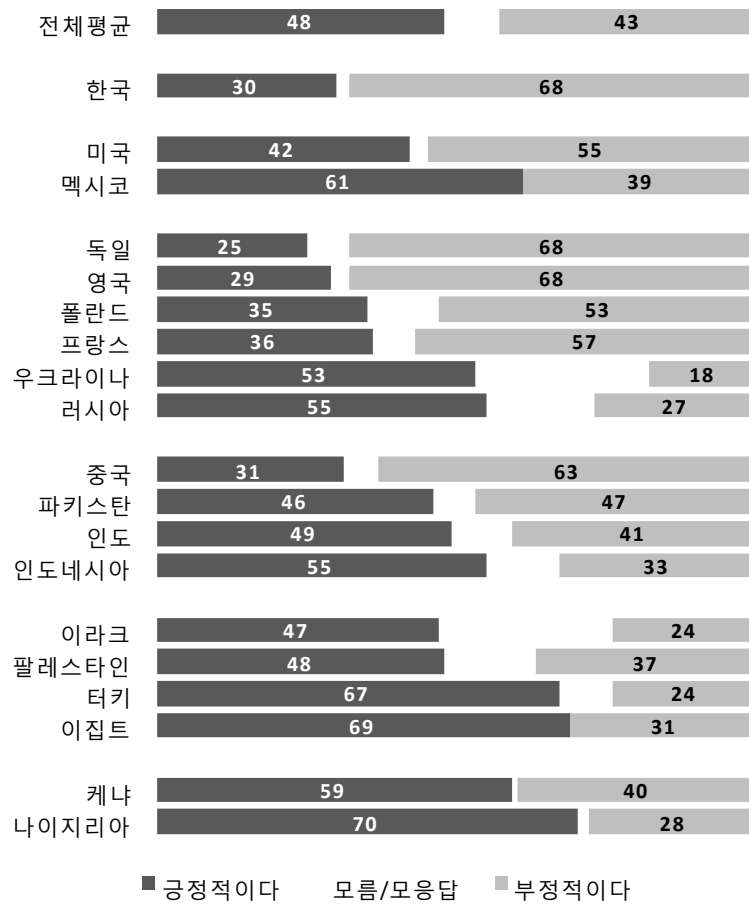
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원, 기술, 시장의 무역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이 강한 나라의 국민일수록 보호주의적 태도에 비판적인 반면, 국내 산업 기반은 취약하면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실제로 반면 경제적 후진국 범주에 드는 나이지리아(70%), 케냐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집트(69%), 터키(67%), 인도네시아(55%)와 같은 산유국 국민들은 경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 구축에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었다.

반면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비중이 서구 선진국이나 신흥공업국 등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장벽 구축에 비판적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보호장벽 구축에 찬성하는 여론이 각각 25%, 29%, 36%였고 반대 여론은 68%, 68%, 57%로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미국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다소 보호주의적 성향이 높지만(42%), 반대한다는 여론이 55%로 보호주의 여론이 소수였다. 중국과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도 찬성여론은 각각 31%, 30%에 그쳤다. 반대 입장은 중국이 63%, 한국이 68%였다. 한국은 조사대상 19개국 중 독일, 프랑스와 함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가장 큰 나라로 분류된다.

1980-90년대 경제자유화 조치와 무역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 한국 국민들 다수는 보호주의적 성향이 다분했지만 20-30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다수는 정부의 보호정책이 상대국의 또 다른 무역보호정책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자원이나 시장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비교우위의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보호주의 정책이 한국경제의 활로와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 보호무역에 대한 인식(단위 %)



## EAI(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WPO 국제여론조사 한국조사 개요

|      |  |
|------|--|
| 모집단  |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 표본크기 | ● 600명   |
| 표본추출 |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
| 표집오차 |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br>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4.1\%$      |
| 조사방법 |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
| 응답율  | ● 12.9%  |
| 조사기간 | ● 2009년 6월 5일  |
| 조사기획 | ● 월드퍼블릭오피니언 · 동아시아연구원                                      |
| 조사기관 | ● (주)한국리서치   |